

20년간 광주·전남 청년 22만명 수도권으로 떠났다

2004~2024년 순유출 청년, 광주 9만7000명·전남 12만5000명
일자리·의료 등 생활서비스 부족 이유...6대 광역시 청년인구 감소

지난 20년간 광주·전남지역 청년(19~34세) 22만여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 인구가 대거 수도권으로 순유출되면서 지역 인구 순유출세도 지속됐는데, 전남지역은 귀농·귀어를 비롯한 중장년층(40~64세)이 유입되면서 순유출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순유출인구는 전체 유출인구에서 유입인구를 제외한 인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 20년간 청년 인구를 중심으로 매년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세가 지속됐다.

광주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는 2004~2024년 기준 12만 4000명으로, 이 중 9만 7000명(78.2%)이 청년이었다.

광주 청년 인구는 2004년 8000명 순유출을 시작으로 2014년(-4000명)까지 점차 순유출폭을 좁혀왔지만, 2019년(-6000명)을 기점으로 다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광주를 비롯한 6대 광역시 모두 인구 감소 및 일자리·의료·금융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 부족 등을 이유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6대 광역시 인구이동 동향을 보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지난 20년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순유출됐고, 인천 역시 통계로는 수도권에 포함됐지만 도시의 자체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광주의 중장년층 인구는 대부분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중장년층도 매년 1000여명 정도 수도권으로 순유출됐으나,

2010년 이후로는 오히려 중장년층이 수도권을 떠나 광주로 소폭 순유입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도 지난 20년 동안 9만 5000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 전남 인구이동을 보면 2013~2015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수도권으로 순유출세를 보였다.

오히려 2013~2015년에는 인구가 소폭 늘었는데, 나주시 빛가람동에 조성된 '빛가람혁신도시'로 순유입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남 역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세는 청년 인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남에서 순유출된 청년 인구는 2004~2024년 기준 12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남 역시 지난 20년동안 매년 청년들이 순유출됐다.

반면 전남의 중장년층 인구는 지난 20년 간 4만 3000명이 수도권에서 순유입되는 등 순유입세가 지속됐다. 이는 귀농·귀어·귀촌에 대한 중장년층 수요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누리호 4차 발사대 기립
지난 16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4차 발사를 앞두고 최종 시험을 위해 발사대에 기립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960만 회원’ 롯데카드 해킹 피해 눈덩이...“예상보다 훨씬 심각”

보안패치 설치하지 않아 공격 노출
대국민 사과·피해 대책 발표 전망

회원 960만여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규모가 수십만~수백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1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금융당국의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및 피해자 규모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사는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이번 주 조작성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피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롯데카드가 금융원에 보고한 유출 데이터 규모는 1.77기바이트

(GB) 수준이었지만, 금융당국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된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확인 작업이 잘 끝나면 이번 주 안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규모도 당초 예상처럼 수만명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의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 피해자 규모가 백만명 단위에 이를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뒀었다.

지난달 14~15일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이뤄져 내부 파일이 유출됐고, 카드 정보 등이 결제 요청 내역에 포함됐을 수 있다는 추정이었다.

롯데카드를 인수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롯데카드가 사용했던 결제관리 서버는 10년 전 취약점이 발견돼 대부분 금융사가 보안 패치를 설치한 것인데 롯데카드네 이를 적용하지 않아 해킹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종 해킹 공격을 당한 뒤 17일이 지난 지난달 31일 정오경에서야 사태를 인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전기차 지원금 추가 지급...272대 지원

국·시비 19억6000만원 확보...23일부터 신청

광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자 국비를 추가 확보해 승용차 250대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전기승용차 추가 공고 물량이 하루 만에 소진되자 국비 12억 8000만원, 시비 6억 8000만원 등 총 19억6000여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써 전기승용차 250대를 새로 보급하고, 앞서 취소했던 22대도 다시 배정한다. 전기화물차는 기존 공고에서 잔여한 16대가 남

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기승합차는 이미 마감됐다. 보조금은 차종·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기승용차는 중대형 기준 최대 91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광주에 주소 둔 시민과 지역 내 사업장을 둔 기업·단체다. 신청은 23일부터 시작되며 물량 소진 시 종료된다. 구입 희망자는 가까운 전기차 대리점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지원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

칙'에 따라 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등록 후 2년 내 판매할 경우 광주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타 지역으로 판매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시비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광주시 콜센터 또는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보조금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 보조금의 70%는 지원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특검,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시사...원칙대로 엄정처리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세 차례 소환 불응 끝에 자진 출석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7일 '피의자가 공범 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혐의 없이 원하는 날짜에 일방 출석했다'며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대로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8·11·1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 측은 심장 시술 등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가, 체포영장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날 나왔다.

특검은 한 총재의 몸 상태가 조사 불가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3차 통보일 15일 불응하고 이를 만에 나온 점도 비협조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 공소장에 한 총재 승인 하 금품 전달·청탁이 있었다는 취지가 적시됐고, 교단은 개인 일탈이라며 개입을 부인해 왔다.

한 총재는 주치의·간호사와 함께 출석했고 건물 지하에 앰블런스가 대기했다. 특검은 50여 쪽 질문지로 신문 중이다.

권 의원은 영장심사에서 결백을 주장했다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했다.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은 신병 확보 필요성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여수시 공고 제2025-269호

여수 읍촌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재지정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이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방문하시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1일
여수시청

1. 개발행위허가 제한 재지정
가. 제한지역: 여수시 읍촌지구 산내리 1587-3번지 일원
→ 면적(합계) 5,269.48㎡ (1,596.81가량)
→ 면적(구분) 933.42㎡ (282.362가량)

나. 제한 및 재지정 사유
→ 본 지역은 읍촌지구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은 물론 부동산 투기·세입, 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수렴될 때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하오니, 개발 행위 조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생활권 및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재지정 하고자 함

다. 제한행위
→ 건축물의 건축(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개축, 증축, 재축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단구, 부지 중립)
→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분간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라. 제한제외행위
→ 공공시설로서 개발행위제한 목적 및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허가신청이 접수된 토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심의·교통영양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토지
→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인 후 30일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보강, 재개발 및 복구 목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인정할 경우

마. 제한기간: (당초) 2023. 6. 22 ~ 2026. 6. 21(3년)
(변경) 2023. 6. 22 ~ 2028. 6. 21(5년)

2.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2025. 9. 11. ~ 2025. 9. 25)

3. 열람장소: 여수시청 공영개발과(☎061-659-4578)

4. 열람도서: 계획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 문의사항: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백지개발팀(☎061-659-4578)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정규직 채용 공고**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섬과 연안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2025년 정규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예정 인원: 연구직 원급 1명
(분야: 생물정보 생산·관리)

2. 채용자격 기준
• 채용자격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자원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의 방법 및 일정(예정)
• 서류심사→인성검사와 발표자료 제출(10.23~28, 온라인)→면접시험(10.30)

4. 응시원서 제출 기간 및 방법
• (원서접수 기간) '25.9.24.09시부터 10.2.14.00:59까지
• (원서접수 방법) 전자우편(recruit@hnibr.re.kr)으로 응시원서 작성·제출

5. 기타
•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자원관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공지합니다.
• 시험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 사전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공지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한문의사항은 채용 전자우편(recruit@hnibr.re.kr) 또는 채용(원서접수) 담당자(061-288-783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8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13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종문화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행구독 (062) 220-0550
---------------------	---------------------	---------------------